

민주당, 내달 선출직 평가…광주·전남 단체장 ‘긴장’

광역·기초단체장에 지방의원들도 하위 20% 추려내 경선 득표 20% 감점…살생부까지 나돌아 평가 시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부터 선출직에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현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돌입할 예

정이다.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게는 후보자 추천심사 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를 감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한다. 따라서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20%의 감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 관문을 넘기가 어렵다.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 평가가 진행된

다. 이를 출마 예상 현역들에게 적용하면,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출신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으로 이 중 1명이 하위 20%에 포함된다.

또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로 이뤄지고, 광역의원은 의회별 또는 상임위원, 기초의원들은 의회별 평가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기초단체장은 광주 5명 중 1명, 전남은 민주당 소속 18명 가운데 3선 제한에 걸린 완도군수를 제외한 17명 중 최소 3명이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다.

광역의회는 의회별 평가 시 광주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21명 중 4명, 전남도의회는 56명 중 11명이 하위 20% 대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하위 20% 명단을 사실상 ‘살생부’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는 민주당의 심장 부이자 텃밭인 만큼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고 있어, 20% 감점 페널티는 ‘공천 탈락’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역 역대 선거에서도 하위 20% 대상자 대부분은 불출마를 선택해 왔다.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도 20%가 감점되면 경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현역들의 생사를 전 선출직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비위를 넘어서 친인척과 측근까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등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하위 평가를 받는 사례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선출직 평가를 강화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단체장이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차분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도전자들의 힘을 빼 놓기도 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다음달 선출직 평가를 앞두고 평가 대상이 되는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그동안의 각종 성과를 챙기는 등 평가 대비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출마자는 “지역 정치권 내에서 ‘누가 하위 20%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등의 악의적인 루머는 재선이나 3선을 준비하는 현역에게는 치명적이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 내는 후보에 대한 페널티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의 13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온(ON) 시민정책참여단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시청 현안을 공유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플랫폼 ‘광주온’ 소통 창구 자리매김

광주시, 민선 8기 첫 시행…가뭄대책 등 70회 진행

민선 8기 광주시를 대표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광주온(ON)’이 시민 중심의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온은 지난 2022년 12월 ‘가뭄대책·물 절약 실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0여건의 설문조사와 3000여건의 시민제안을 처리했다.

시는 이날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민정책참여단 100여명과 함께 ‘광주온(ON)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시민정책참여단은 광주온(ON)을 통해 시청 설문에 참여하는 광주시민들로, 광주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을 넘어 강기정 시장과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직접 논의하는 현장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육아하는

엄마·아빠의 마법의 1시간으로 불리는 ‘초등학부도 10시 출근제’ 등 정책들에 대해 시 담당국장이 정책 취지와 성과 등을 직접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시민정책참여단이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궁금한 광주시 주요 정책 3가지’로 뽑은 ‘복합소방망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은 광주시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광주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때 시민행복은 물론 행정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시민들과 상시적인 소통이 필요한 이유”라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온(ON)’ 플랫폼 등을 통한 시민 소통을 활발히 진행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광주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0@

김영록 지사, 미래 100년 위한 국비 확보 ‘광폭 행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소영 예결위 간사 잇따라 면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10대 중역 건의사업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를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미래 100년 전남 도약’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남 주요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임기근 2차관과의 면담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회 중역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전남 주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소영 간사를 만나 “전남은 SK와 오픈AI가 협력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전락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이어 “특별한 회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전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731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130억원) △국립 김산산업진흥원 설립(10억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5억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업 구축(40억원) △전남도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5억원) 등 ‘10대 중역 건의사업’을 직접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솔라시도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의 상징 도시로 육성해 대

한민국형 ‘AI에너지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며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해양·에너지·AI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이룰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2026년 국비 10조원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9조4000억원을 반영시켰으며, 국립해양수산업박물관 건립과 여자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SK·오픈AI 데이터센터 협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등과 연계해 전남형 미래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박정환 기자 holbul@

▶1면 ‘영농형태양광’서 계속

농촌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 농촌 생활연구 확대를 위해 빈집재생민박 사업도 도입한다.

특히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농업인들의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20ha, 참여농업인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나주,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최적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계획서 제출

전남도가 13일 한국연구재단에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에 글로벌 핵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담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15일 공고한 ‘(가칭) 핵융합시설 핵심기술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 따른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를 도정 최우선 현안으로 판단하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 실·과 나주시가 참여하는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유치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유치 후보지인 나주는 지진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단단한 지반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정주 여건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

이 집적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핵융합 연구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는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서는 부지의 안전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했다”며 “에너지 특화도시 나주는 입지 조건과 정주여건 측면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의 최적의 장소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다. 청정에너지 확보와 미래 첨단산업 기술 자립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군공항 이전·亞문화도시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안도걸,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처 주창

광주지역 핵심 현안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광주 지역의 두 핵심 국가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기획과 실행력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안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4년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11년째 교착상태였다가 정부의 집요한 설득 노력으로 무안군이 6자 협의체(TF)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연내 신속한 합의와 실행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지역이 요구한 지역경제발전 지원패키지가 관건”이라며 “부산 전력특구 지정·조성, 첨단산업분야 기업 투자유치, AI 기반 스마트팜 조성 등 지역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원패키지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가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정부의 기획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성법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주도형 비전이 부재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조성 용역’ 등 주요 과제가 문체부의 체계적 관리 아래 추진되도록 일당서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 추진체계 유명무실화에 대해서는 “추진단 단장이 공식인 채 과장이 겸임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아문당청)’ 신설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신설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추진단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며, CT(문화기술) 연구소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아문당 상징조형물 조성’, ‘아시아융합형 킬러콘텐츠 제작’ 등 시민이 제갈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적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